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6면	"강한 청년·경제인·강원도 만들어 나갈 것"	1
江原日報	07면	"젊은 피 열정으로 강원경제 발전 이끌자"	2
江原日報	21면	“새마을정신 바탕으로 새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열겠다”	3
강원도민일보	26면	"미래 향한 도전·혁신 함께 사는 따뜻한 나라 만들자"	3
江原日報	02면	강원디자인페스타 개막	4
강원도민일보	26면	'새로운 강원, 디자인 시대' 디자인 페스타 막 올랐다	4
강원도민일보	26면	강원권 성주류화정책 확산 공감토론회	5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5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교육위,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전액삭감	6
江原日報	03면	예산안 심의하는 자치도의회	6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들녘별 화장실''이 뭐길래...강원도, 예산 전액 삭감했다 ''...	7
강원도민일보	26면	내달 1일까지 한림성심 산학협력 EXPO 개최	8
江原日報	02면	“잊혀 가는 강원 무형문화유산 보전하자”	9
강원도민일보	26면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보고회	9
엔사이드	온라인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	10
강원도민일보	03면	강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 조례 제정… 위반 시 출하 정지	11
MBC 강원영동	온라인	'강원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조례안 제정' 9부 능선 넘어	12
연합뉴스		오염수 불안 '뚝' 소득은 '쑥'...강원 수산물 안전조사 조례 ...	13
철원신문	온라인	엄기호 의원, “국방과학고 등 마이스터교 개교 준비 예산 ...	14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간이 없다	15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박상수(왼쪽) 삼척시장·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	16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이무철(왼쪽) 도의회 경제산업위 부위원장·박찬흥 ...	16
강원도민일보	04면	학교 전자칠판 연일 시끌… "굳이 설치해야 하나" 고심	17
강원도민일보	04면	속초 대관람차 사업취소 놓고 시의회 의견분분	17
江原日報	01면	외국인 근로자 확보 쟁탈전 '뒷짐 진 道'	18
江原日報	01면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효과 10월 도내 관광객 '1,393...	19
江原日報	02면	軍 고성 ‘원형 보존 GP’ 복원 추진	20

강원도민일보	04면	도, 횡성에 E-모빌리티 실증단지 오늘 착공	21
강원도민일보	01면	동해안 손님 몰리자 쓰레기 산더미… '웃픈' 지자체	21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전 도정 감사·수사, 공직 '복지부동' 안돼	22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소중하다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남북관계 경색, 접경지역 민생 특단 대책 세워야	24
江原日報	19면	[사설] 가파른 사교육비 잡아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	25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경제 06면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출범 1주년 기념 및 청년경제인 전진대회가 29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회 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희태

“강한 청년·경제인·강원도 만들어 나갈 것”

강원청년경제인연합 출범1주년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회장 박재희)는 29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출범1주년 기념 및 ‘청년경제인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강원청년경제 발전을 도모했다. 이날 기념식·전진대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회 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모혜란 중진공 강원지역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후원회 및 자문위원단 소개와, 청년인터뷰·1주년 기록 영상 시청, 1주년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또 도지사표창에는 한승후 위드사람컴퍼니 대표 등 3명이 수상, 춘천시장 표창에는 김응수 대신네트웍스춘천대표 등 3명이 수상했다. 홍천군수, 양구군수, 강원조달청장 표창, 연합회장 감사패 수여 등 시상도 진행됐다. 박재희 회장은 “후배 강원청년경제인들이 더 폭넓게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연합회가 앞장서 더 강한 청년, 강한 경제인, 강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선우

2023년 11월 30일 (목)
江原日報
경제 07면

“젊은 피 열정으로 강원경제 발전 이끌자”

강원청년경제인聯 출범 1주년 기념식·전진대회 춘천서 열려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는 29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청년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도내 청년 경제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년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등 내빈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팀 ‘무스’의 공연으로 시작을 알린 기념식은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식으로 이어졌다.

한승후 (주)위드시람컴퍼니 대표, 강원선 중앙기획 대표, 이현서 아이캠 대리가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11명이 각종 기관·단체장 표창을 수상했다. 강원청년경제인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무철 도의원과 연합회 설립을 지원한 이종천 경제국 행정사무관에게는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 1주년 기념식이 29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두원기자

박재희 강원청년경제인연합회장은 “청년들을 위해 물심양면 힘써주시는 경제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강한 청년경제인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어려운 와중에도 청년경제인을 위한 교육사업에 내년도 도비를 편성했다”며 “내년 2주년 기념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여러분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청년 여러분이 있기에 강원경제에 희망이 보인다”며 “청년경제인들이 좋은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여러분이 성공해서 경제가 나아지면 인구소멸을 대응할 희망이 보일 것”이라며 “도 교육청은 경제인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강원도에 애정을 갖고 일하는 분들인 만큼 청년경제인들이 승승장구할 것으로 믿는다”며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haha@

江原日報

2023년 11월 30일 (목)

인물 21면

“새마을정신 바탕으로 새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열겠다”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 인제서 열려
훈포장 수여 … 따뜻한 나라 만들기 실천 결의문 채택

◇2023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가 29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새마을 지도자들이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열 것을 다짐했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지도자대회가 29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최상기 인제군수, 신영재 홍천군수, 이춘만 인제군의장, 박영록 홍천군의장, 김일용 고성군의장, 박대현·심영곤·하석균 도의원, 김종복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박형배 강원도새마을회장, 이건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도내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김낙균(정선)씨가 새마을훈장 근면장을, 김영자(인제)씨가 새마을포장, 김진환(인제)·김진권(인제)·송중길(원주)·이보은(강릉)·장춘집(철원)씨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석한 도내 새마을지도자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및 친환경 생활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문화 조성,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곳에 돌봄과 나눔 실천, 새마을운동을 통한 ‘함께 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기’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실천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 같은 성장의 주역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이라며 “새롭게 재도약하는 미래 강원을 위해 함께 뛰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50여년 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새마을정신을 되새겨 낸다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배 도새마을회장은 “올 한해 4만 강원새마을가족 모두 시대가 요구하는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김종복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은 “새마을이 많이 움직여야 강원도도 발전한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서게 한 역사”라며 “새마을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산되도록 힘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인제=김보경기자

2023년 11월 30일 (목)

강원도민일보

인물 26면

“미래 향한 도전·혁신 함께 사는 따뜻한 나라 만들자”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성료
김진환·김신기 등 대통령 표창
“이웃 사랑·나눔 실천 감사”

2023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29일 인제하늘내린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인제군새마을회 주최,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주관으로 열렸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29일 인제하늘내린센터에서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 라는 슬로건아래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인제군새마을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김종복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박형배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 조남웅 인제군새마을회장, 김영자 인제군새마을부녀회장, 김진환 새마을지도자인제군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회장단 및 회원들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최상기 인제군수, 이춘만 인제군의회의장, 신영재 홍천군수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배 도새마을회장은 대회사에서 “한해동안 우리의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온 새마을지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잘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김종복 회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으로 ‘함께 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이어 김진태 지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을 이뤄 낸 기적같은 성장의 주역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이라며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신조로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 있는 미래 강원의 재도약을 위해 함께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축사에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 새마을 운동을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환영사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춘만 인제군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새마을운동이 지난 성과와 영예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마을훈장 근면장=김낙균(정선) △새마을 포장=김영자(인제) △대통령표창=김진환(인제)·김신기(철원)·박순옥(홍천)·이영자(삼척) △국무총리 표창=선승환(횡성)·김진권(인제)·송중길(원주)·이보은(강릉)·장춘집(철원) 등을 비롯해 행안부장관·새마을운동중앙회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장 표창 등이 전달됐다. 진교원

江原日報
2023년 11월 30일 (목)
종합 02면

◇'강원디자인페스타 2023' 개막식이 29일 춘천시 후평동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 신경호 도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박찬흥·박대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강원디자인페스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주최·주관한 '강원디자인페스타 2023'이 29일 진흥원 전시장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강원디자인페스타는 디자인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원체계 고도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새로운 강원, 디자인 시대!'를 주제로 열린다. 내년 3월까지 지원사업 기업 제품과 성공사례를 볼 수 있는 기업지원관, 도 상징물과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공공디자인관 등 5개 관에서 전시를 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회 강원디자인전람회' 시상도 진행됐다.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굴레에서의 탈피를 위해(박기연)가 차지했다.

개막식에는 김진태 지사,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박찬흥 도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인물 26면

강원디자인페스타2023개막식이 29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렸다.

'새로운 강원, 디자인 시대' 디자인 페스타 막 올랐다

강원디자인 전람회 대상에 박기연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강원디자인페스타 2023'의 개막식이 29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김진태 지사와 신경호 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부사장,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강원디자인페스타는 '새로운 강원, 디자인 시대'를 주제로 내년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산·학·연·관 교류와 강원 디자인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진태 지사는 "디자인은 삶 자체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것"이라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디자인 경영을 통해 이끌겠다"고 했다.

이날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제2회 강원디자인 전람회 시상을 진행했다.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굴레에서의 탈피를 위해(박기연)가 선정됐다. 김덕형

▶수상자명단 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인물 26면

강원권 성주류화정책 확산 공감토론회 강원권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 '지방 성평등 정치,불씨를 살리자'가 29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종합 03면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29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김기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江原日報
2023년 11월 30일 (목)
종합 03면

도의회 교육위,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전액삭감

사업 성과·문제점 분석 미비 지적 … 재검토후 추진 주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전자칠판 학교 보급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교육청이 편성해 상정한 학교 전자칠판 지원 사업비 155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을 재검토한 뒤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스마트기기수업환경지원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 27일부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해왔다. 28일에는 실제 도내 학교를 찾아 전자칠판, 스마트기기에 대한 학교 현장 반응 등을 살폈다. 이어 이날 △스마트기기수업환경지원 27억8,000만원 △학교전자칠판지원 155억5,500만원 △ESG경영정책활성화추진 1억7,841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246억4,643만6,000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성과나 문제점, 만족도 조사와 분석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우선 세우고 추후 문제를 개선한다면 뒤늦은 처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희철(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워크숍, 회의를 할 때 외부시설을 임차한 경우가 130번이 넘었다"며 "본청 등에도 공간이 많은데, 긴축재정 상황에 맞춰 예산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농림수산위원회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년 11월 30일 (목)
종합 03면

예산안 심의하는 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김용래(국민의힘·강릉)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29일 (수)

정치

"들녘별 화장실"이 뭐길래...강원도, 예산 전액 삭감했다 "회생"

강원도가 농업 예산 삭감으로 '농민을 외면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액 삭감됐던 '들녘별 화장실' 예산을 강원도의회에서 재편성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지난 28일 2024년도 농정국 예산을 심사하고, 4억3500만원을 계수조정해 수정가결했다.

농수위는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등을 일부 삭감했고,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비 등을 각 2억40만원, 8600만원 증액했다.

특히, 강원도가 전액 삭감했던 '여성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비'는 도의회 농수위가 다시 살려냈다.

'들녘별 화장실'은 논, 밭 등 농업 현장 특성상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내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생활 보장권' 보장을 주장하며 정책을 건의했고, 지난 2022년 1억2000만원을 들여 도내 20개소를 설치했다.

농림수산위원인 엄윤순(인제) 의원은 "여성농업인들은 특히 화장실이 문제다. 사업비가 계상조차 안 돼 있단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예산 재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찬성(원주) 의원도 "화장실은 인권에 대한 문제"라며 "여성 농업인들이 갖고 있던 고충인데,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기존보다) 증액을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농민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바가지 긁듯 삭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예산 삭감에 따른 어려움은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원권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한영미 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장은 이날 토론에서 "노동자들한테 노동현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그런데 저희 일터에는 화장실이 없다. 과거에는 문제 의식이 없었겠지만, 화장실이 없다는 건 불평등하다는 것"이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들녘별 화장실 등 이날 농수위가 증액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확정된다.

전찬성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들녘별 화장실 외에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비 970만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42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해 내년도 예산에 담기지 않았다. 또, 농업인 수당 14억28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농정국 내년도 예산규모는 4813억원으로 전년대비 218억원(4.7%p)가 늘었다. 이는 국비 207억원, 공익직불제 등 기금 115억원 등에 따른 것으로, 도비는 전년대비 27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지원 등은 강원도비가 투입되는 자체사업이라 농업 현장의 체감이 큰 상황이다.

한편, 농정국 예산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7.1% 수준이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인물 26면

내달 1일까지 한림성심 산학협력 EXPO 개최

한림성심대(총장 문영식)가 지역내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난 1년간 운영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산학협력 EXPO를 마련했다.

2023 한림성심 산학협력 EXPO가 29일 한림성심대 일송체육관에서 문영식 총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양숙희 도의원, 이영철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취업·진로상담 △면접 준비를 위한 이미지메이킹 △타로카드를 통한 진로·적성확인 △티셔츠 프린팅 체험 △나만의 커피티백 만들기 △캡스톤디자인 출품작 및 팀 프로젝트 우수 성과 전시 △창업경영연구소 홍성호 대표 특강 등이 운영됐다. 행사 2일차인 30일에는 산학연 연계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가 열리며,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시상식과 폐막식이 진행된다.

문영식 총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목표"라며 "이번 행사가 대학과 지역사회 기업간 상생과 발전의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림성심대는 29일 교내 일송체육관에서 '한림성심 산학협력 EXPO'를 개최했다.

김진호 시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깊은 지금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앞으로도 한림성심대가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양숙희 도의원은 "전국에 여러 대학이 있지만 한림성심대처럼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교는 없다"며 "한림성심대가 세계적인 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계속된다. 정민엽

2023년 11월 30일 (목)

江原日報

종합 02면

"잊혀 가는 강원 무형문화유산 보전하자"

자치도의원 연구회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삼척 안정사 땅설법, 인제 엄달골 서낭제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현황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는 이날 9개 시·군 28건의 무형문화유산을 선정,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강릉 용굿, 동해 보역새놀이, 태백 아라레이, 인제 풀써는 소리,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 양양 동호리 멸치후리기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특히 속초 아리랑, 삼척 미로단오제, 홍천 화동리 장승제 등 5건은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발굴됐다. 연구회는 올 6월부터 도내 9개 시·군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추후 연구회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도내 9개 시·군에 대한 문화유산 발굴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종모 강원문화재연구소장은 "그동안 도내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연구회 활동으로 시금석이 마련됐다. 다만 아직 조사하지 못한 무형문화재도 다수"라고 강조했다.

김정수 (국민의힘·철원) 연구회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잊혀 가는 무형문화유산 콘텐츠를 보전, 전승할 것"이라며 "각 시·군과 긴밀히 협력,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인물 26면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보고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회장 김정수)가 29일 도의회에서 강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현황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연 가운데 무형문화유산 28건을 선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도의회

2023년 11월 29일 (수)

정치

엔사이드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김아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잊혀져가는 강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회인 "강원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는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현황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강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현황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회 김정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재)강원문화재연구소는 중간보고 시 건의된 의견을 보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9개 시·군의 무형문화유산을 28건 선정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수 회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잊혀져가는 무형문화유산 콘텐츠를 보전, 전승하기 위하여 각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프레스뉴스, 신아일보 등 20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종합 03면

강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 조례 제정… 위반 시 출하 정지

분권G - 우리마을조례 (강원)

강원특별자치도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9일 김용복(고성)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다음달 1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조례는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도록 명시(제5조)했다. 생산단계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저장 및 거래 이전 단계에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을 폐기하고 일시적으로 출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제7조)를 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오는 2025년부터 5년간 안전성조사를 위해 16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엔 실험·분석실 리모델링비 3억원, 중금속 2종과 항생물질 1종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 3대 구입비 6억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연구사와 일반직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된다. 이날 강정호(속초) 의원은 조례 심사에서 "16억5000만원 가운데 보조금(국비)이 5억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라며 "다른 시도와 달리 동해와 남해를 낀 광역단체에는 국가보조가 더 돼야 한다"며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강원도는 현재 한해성수산자원센터와 수산자원연구원 2개소에서 장비 2대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21개 수협 위판장에서 시료를 확보해 세슘과 요오드 검출을 분석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크게 적은 규모다. 인천은 장비 307대로 67개 항목, 부산은 104대로 71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설화·최우은

MBC 강원영동

2023년 11월 29일 (수)

강원

'강원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조례안 제정' 9부 능선 넘어

조규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조사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강원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ㅓ
오늘(29) 회의를 열어, 수산물 안전 관리와
시료 수거·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은
어업인 소득 증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년 11월 29일 (수)

종합

오염수 불안 '뚝' 소득은 '쑥'…강원 수산물 안전조사 조례 제정

붐비는 수산물 좌판풍물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조사와 상품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9일 제324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고성)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안전관리와 시료 수거.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과 관련 안전 교육,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업 생산량은 연간 5만8천371t 규모로, 금액으로는 3천164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강원을 제외하고 바다를 접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상위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어업인 소득 증대 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명성일보, 누리일보 등 42개 언론사 보도

2023년 11월 29일 (수)

철원신문

자치의정

엄기호 의원, "국방과학고 등 마이스터교 개교 준비 예산 점검"

– 국방과학고, 한국항공고등학교, 산림과학고 등 마이스터교 편성 예산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28일 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방과학고를 비롯한 마이스터교 개교 준비와 관련된 예산안 편성을 점검했다.

엄기호 의원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교 육성 사업예산안에 국방과학고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6천5백만 원, <기자재확충 및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억2천7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구체적 사업계획 또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했다.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국방과학고의 경우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24년도 예산이 기자재 확충에 필요한 전체 규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답했다.

엄기호 의원은 국방과학교 개교가 2026년으로 예정되어 아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교육청이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2023년 11월 30일 (목)

江原日報

오피니언 19면

강원포럼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간이 없다

도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만들어 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거의 반년이 지났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은 계획했던 것에 비해 많은 특례를 담지 못해 아직 개정할 부분이 많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3차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촉박함 역시 조바심을 갖게 한다. 내년 6월에 시행될 2차 개정안은 84개 조항이며, 강원자치도의 4대 규제 완화, 중앙부처 권한 이양,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및 특화산업 육성 등 강원자치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2차 개정안은 도·의회·교육청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더욱이 자치재정에 관한 특례는 아예 제출조차 못 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한 채 강원자치도가 출범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원자치도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반영이 무산됨으로써 도지사가 핵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마저 든다. 이외에도 관광산업 활성화, 광물, 해양심층수 등 자원 활용에 대한 특례 등이 빠져 있다.

그렇기에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반도체 및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교육자치 및 특구 지정, 관광산업 활성화 및 폐광지역 대체산업, 접경지역 첨단 방위산업 등에 관한 특례들을 담아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위에서 언급한 2차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특례들을 재검토 및 보완하고 신규 특례 발굴에 중점을 둬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회·교육청의 자치조직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교부세와 각종 교부금, 기금 및 세제 등 재정권에 관한 특례 반영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의미하는데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우리 스스로의 자치조직권과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크나큰 손실이기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때 가장 시급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3차 개정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발굴한 특례들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도의원 전원, 시·군 및 교육청,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을 총망라해 3개 분야 12개 분과별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시·군별 특례 발굴 및 입법과제 선점, 법제화를 위한 작업들을 신속하게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도민들께서 바라는 미래산업, 교육 등 강원특별법의 취약분야를 보완하고, 토지규제 완화 등 생활 현장 규제 완화 특례를 발굴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3차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법 시행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강원특별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특별법상 위임사항과 이양된 권한, 사무에 대한 시행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대응해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내년 6월8일 전까지 후속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도민이 함께하는 이 걸음을 통해 ‘새로운 강원, 행복한 강원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 도의회의 보다 철저한 논의와 전략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3차 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인물동정 15면

영위원장은30일 오후 2시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한다.

박상수(왼쪽) 삼척시장·심영곤 도의회 운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인물동정 10면

이무철(왼쪽) 도의회 경제산업위 부위원장·박찬흥 도의원은 30일 오전 10시 춘천시소양동일대에서 진행되는사랑의 연탄배달봉사에참여한다.

2023년 11월 30일 (목)

종합 04면

강원도민일보

학교 전자칠판 연일 시끌…“굳이 설치해야 하나” 고심

도내 일부 학교 사업취소 고려

도교육청 2차 예산 교부 연기

참여기준 미충족 신청 철회도

“52곳 중 8곳 보류 희망 더 많아”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두고 논란이 계속(본지 11월27일자 웹 보도 등)되자 사업을 신청했던 강원도내 일부 학교가 사업 취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본지 취재결과 당초 도교육청은 2023년도 전자칠판 사업에 대한 2차 예산 교부를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예산 교부가 연기된 데는 전자칠판 사업을 두고 도교육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제기가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의 도교육청 방문, 시민단체의 비판 성명, 언론 보도 등이 이뤄진 이후에는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는 학교 문의전화가 도교육청에 10여 건 접수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는 29일에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학교가 사업을 취소할지, 진행할지를 좀 더 협의하겠다고 한다. 기다려달라고 해 예산이 다음주에 나갈 것 같다”고 밝혔다.

2차 예산 교부 대상 학교는 총 52곳이다. 전자칠판 220여 대에 대한 예산 17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나 현재 52개 학교중 8곳이 사업 진행을 보류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지역과 학교급 모두 익명을 당부한 A학교 관계자는 “교육감이 직접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전자칠판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교실에 설치되면 좋은 점도 있겠으나 굳이 시끄러운 지금 설치해야 하나 싶어 사업 신청을 취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겠다며 사업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사업 참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자칠판 사업을 철회한 학교도 발생했다. 원주 B학교는 학교 시설 개축과 사업 성격이 중복돼 사업을 취소했고, 춘천 C학교는 아직 칠판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사업 신청을 철회했다. D유치원은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 공간이 협소해 전자칠판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C학교 관계자는 “사업 논란을 의식해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며 “신청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 현재 설치된 칠판의 내구연한이 남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대상에서 빠진 학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사업 대상을 앞당겨 교부하려고 한다. 여전히 전자칠판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도 전자칠판 사업 예산 155억5500만원 전액을 감액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2023년 11월 30일 (목)

종합 04면

강원도민일보

속초 대관람차 사업취소 놓고 시의회 의견분분

지역대표 관광지 역할 지속 제안 등

위법행위 행정조치 촉구 ‘엇박자’

속초시가 최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에 대한 사업시행허가 취소 등의 조치에 나선 것을 놓고 속초시의회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신선익 시의원은 29일 진행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속초시가 기획해 민자사업으로 완성한 것”이라며 “지난 1년 8개월간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등 당초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쳐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명길 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제33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 “최근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우선협상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관람차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취소하고 대관람차와 탑승 건물에 대해 해체 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속초시에 대한 행안부 감찰 결과에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수차례 발견됐으며 속초시는 위법성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신선익 의원은 “현 속초시의 대관람차에 대한 행정조치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박주석

2023년 11월 30일 (목)
江原日報
종합 01면

외국인 근로자 확보 쟁탈전 '뒷짐 진 道'

내년 취업 분야 확대로 지역·업종별 인력 모시기 경쟁 예고
수도권 선호 뚜렷한 상황 … 도내 유인할 대책 사실상 전무

연 매출액 300억원대 규모인 강릉의 A 빙과류 제조업체는 생산직 직원 50여명 중 절반이 외국인이다. 정부의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확보한 외국인은 손에 꼽고, 대부분은 결혼이주여성들이다. A업체 대표는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들도 수도권 거주를 선호하고 있어 지방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평창 봉평면의 B 식당은 올해 5~9월 성수기에 손님을 모두 받지 못했다. 풀타임 근무는 외국인이 아니면 버티지 못하는데 이들도 더 좋은 거주 여건을 찾아 한 달 만에 평창을 떠났기 때문이다.

강원지역의 농촌뿐만 아니라 공장, 식당들까지 외국인 근로자 확보난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지역별·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이 더 심해질 전망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장기 종합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취업 가능한 업종에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E9 비자 외국인은 제조업, 농식품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도내 외국인은 올 3분기 기준 3,743명으로 전국 대비 1.6%에 불과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E9 비자 외국인이 음식점업(한식)에도 취업이 가능해 강원도 외식업계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강원도는 일단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에서만 시범 도입된다.

농촌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18개 시·군별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7,428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점점 늘고 있지만, 실제 배치되는 인원은 수요보다 적고 영농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배치되는 경우도 많아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한건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이민학회장은 "외국인들이 근무지, 거주지로서 강원도를 선택하게 만드는 정책이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타 시·도는 이미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강원도도 비전 수립,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2023년 11월 30일 (목)
江原日報
종합 01면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효과 10월 도내 관광객 '1,393만명'

주개최지 고성 133만명 찾아
전년比 6.4% ⬆ 증가율 1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에 힘입어 지난달 개최지 고성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강원관광재단이 29일 발표한 '10월 강원관광 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고성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133만4,128명으로 전년 대비 8만257명(6.4%)이 늘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고성군의 화암사와 세계잼버리수련장은 전월 대비 관광객이 각각 2만2,704명(106.4%), 5만9,206명(105.36%) 증가했다. 또 세계잼버리수련장 방문객 가운데 50~60대 비율이 48%로 가장 높아 단풍 시즌 시너지 효과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도 방문 관광객은 1,393만여명으로 전월 대비 40만8,795명(3%)이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6만6,004명으로 전년 대비 105%, 전월 대비 33% 증가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와 단풍 시즌의 영향으로 도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연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 방문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관광소비는 약 2,0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18.2% 증가했다.

10월 눈여겨볼 관광지로 방문객이 전년 대비 약 46.15%, 전월 대비 약 908.13% 증가한 홍천 '은행나무 숲'을 비롯해 고성 '세계잼버리 수련장', 정선 '도룡이 연못'이 선정됐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겨울 관광 시즌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11월 30일 (목)
종합 02면

軍 고성 '원형 보존 GP' 복원 추진

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수한 11개 최전방 감시초소(GP) 중 강원특별자치도 고성에 있는 '원형 보존 GP'부터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이 철수했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고성 '829GP'(옛 369GP)를 복원할 방침이다.

남북은 5년 전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당시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1㎞ 이내 양측 GP 11곳을 철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철수 절차가 끝나면서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여개에서 50여개로 각각 줄었다.

원형이 보존된 고성 829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DMZ 내 남측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된 GP다. 2019년에는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통일역사유물)로도 등록됐다.

문화재청 제공

◇고성에 위치한 감시초소(GP)의 모습.

군 당국이 829GP부터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작전적으로 중요한 동부전선 최동북단에 있기 때문이다.

829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로 비무장지대 내 남북 모든 GP를 통틀어 가장 가까웠다. 북측도 829GP 맞은편에 있는 북한군 철수 GP의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GP만 복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대방(북한)이 복원하면 우리도 맞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이무헌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종합 04면

도, 횡성에 E-모빌리티 실증단지 오늘 착공

미래차 산업 육성 박차

전기차 등 강원특별자치도E-모빌리티 산업이 횡성군에서 본격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30일횡성군묵계리 일원에서 E-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 착공식에는 김진태 지사와 유상범 국회의원, 김명기 횡성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E-모빌리티 연구·실증 구축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차산업의 핵심 사업이다. 오는 2024년까지 횡성군 묵계리 일원에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전기차 성능 시험 주행 트랙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장비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1t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 장비 등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480억원(국비 240억원)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구원이 주관 도로교통공단과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다. 김진태 지사는 "E-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는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횡성군이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종합 01면

동해안 손님 몰리자 쓰레기 산더미…'웃픈' 지자체

양양 쓰레기 연간 1만2000t
처리 한계 하루 15t씩 쌓여
매년 10억여원 예산 추가 소요
영동 지자체 상황 대동소이

동해안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가운데 영동권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영동지역 시·군 등에 대한 본지 취재 결과 '서핑 천국'으로 수도권 관광객의 발길이 몰리는 양양의 경우 연간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은 1만2000t 수준이다. 하루 평균 32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양군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양은 하루평균 35~40t에 이르고 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지자체(20t)의 2배에 달한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하루평균 80t, 휴가철이 절정을 이루는 7월말~8월 초에는 하루에 150t까지 반입되고 있다. 군환경자원센터에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처리용량은 30t이지만 그나마 시설이 노후, 80%정도만 가동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실제로는 침출수까지 포함, 하루 21t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어 쌓여가는 쓰레기가 매일 10~15t이 발생하고 있다. 미소각된 쓰레기는 압축 포장 후 2,3일에 트럭 한대씩 연간 1500t 정도의 쓰레기를 태백시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양양군은 태백시로 보내는 쓰레기 외에도 4000~5000t의 쓰레기를 민간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고 있다.

동해안권 다른 시군의 상황도 양양군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속초시의 관광객 수는 2022년 1943만6783명, 2023년 현재(10월말 기준) 1327만3984명이다. 이로 인해 쓰레기 매립량은 2022년 1만954t, 2023년(10월말) 9740t 수준이다. 고성군의 경우 2021년 1156만2375명, 2022년 1310만5393명이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21년 1만5334t, 2022년 1만5547t에 달했으며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2022년에는 35억원을 지출했다.

동해안 관광의 중심지인 강릉시는 생활쓰레기·재활용품·음식물 등 쓰레기처리량이 2022년 7만446t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6만2989t으로 파악됐다. 처리비용으로 2022년 148억408만1570원, 2023년(10월말) 133억693만4740원이 투입됐다. 최근 들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동해시는 전년 11월~당해년 10월 기준으로 2022년 1177만6657명에서 2023년 1213만327명으로 증가했다. 동해의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21년 3만7903t, 2022년 3만8119t, 2023년 3만5123t이다. 처리 비용(t당 단가 8만1000원으로 계산)은 3년 평균 29억8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척시는 2021년 306만7099명, 2022년 352만4514명, 2023년(9월말까지) 325만803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을 합친 쓰레기 발생량은 2021년 1만77.48t, 2022년 9675.06t, 2023년(10월까지) 7574t이 발생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외에 나머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연간 총 10억여원의 예산이 매년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며 "관광객은 몰리지만 이에 따른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어서 재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훈·지역종합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사설/칼럼 21면

전 도정 감사·수사, 공직 '복지부동' 안돼

-역점 사업 검증 강화… 소극적 업무 태도 만연 우려

김진태 도정이 집권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전임 도정의 역점 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전면 확대되면서 특정감사 건수가 늘었고, 전임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역점 사업들이 감사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강원 공직 사회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이나 비리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잇단 감사와 수사가 자칫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업무 자세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도정이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 사이에 '복지부동'이 만연한 풍토가 확산한다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전임 도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재정 효율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도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일단시켜' 배달 앱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임 도정의 역점 사업으로 분류됐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사업,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은 도감사위원회 차원의 송곳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도감사위는 최 전 지사와 해당 사업과 관계된 공직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알펜시아리조트 매각과 관련해선 전임 도정과 KH그룹 간 담합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전임 도정에서 추진했던 역점 사업들이 사정권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감사와 수사가 집중하면서 공직사회에 소극적인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작은 사업 하나를 추진할 때도 행여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시간을 끈다면 추진력은 약화할 것입니다. "굳이 시비와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나"하는 보신주의가 일상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열정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공직 분위기를 일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1월 30일 (목)
사설/칼럼 21면

폭력없는 '안전한 일상' 소중하다

-내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 사회적 요인 개선 계기로

내일 12월 1일까지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폭력 추방일인 11월 25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함께 만드는 여성폭력없는 안전한 일상'이라는 표어를 걸고 여성을 향한 폭력 근절과 예방을 각성하는 동참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해 활동을 벌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무관심한 곳도 있어 온도차가 있지만, 폭력과 혐오 없는 안전한 일상이 유지되길 희망하는 것은 지역과 나라에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여성폭력 양상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입니다. 약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데다가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로 주시합니다. 가정폭력, 교제 폭력이 대표적입니다. 가정폭력은 과거 부부싸움이라며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했으나,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범죄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폭력이 저질러지므로 신고와 대응이 쉽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여성계에서는 7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강간죄' 규정에 폭행과 협박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의 70%는 지위나 권세,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하는 것을 드러납니다. 낡은 형법을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 폭행과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은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에서 시작되므로 스토킹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폭력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은 사이버폭력입니다. 사이버상 언어폭력, 명예훼손, 성폭력과 스토킹 등은 이후 폭행, 자살, 상해와 살해 등 강력범죄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이버폭력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남성이고, 연령층은 20대가 가장 많고 10대를 합쳐 10명 중 7명꼴로 다수를 차지한다는 보고입니다. 이래서는 미래가 더 암울합니다.

더 엄한 처벌과 징역형을 강화하는 징벌적 기조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넘어 여성폭력의 뿌리 깊은 사회 원인을 제거하는 구조적 변혁이 병행돼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범죄 발생을 부추기는 현실적인 사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범률을 높이고 새로운 범죄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목)

江原日報

사설/칼럼 19면

남북관계 경색, 접경지역 민생 특단 대책 세워야

북한, 최전방 GP 복원에 중화기 투입
군인 손님 60% 이상 줄어 상인들 울상
민통선 농사도 위축, 지역경제 직격탄

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북한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고사총 등 중화기를 다시 투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동부지역에서 GP를 복원하고 중화기를 반입하는 모습을 카메라와 열상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일전불사의 각오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복원 조치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당연한 대처다.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안보 분야에서만은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감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벼랑으로 내모는 북한에 대해 우리는 민·관·군(民官軍)이 그 일거수일투족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일단의 유사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그 같은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한에 대해 도발 감행은 자멸의 길일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정부와 군의 대비 태세 그 근간이며 국민적 경각심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길은 확고한 대처에 달렸다. 북한은 상대가 약하게 나오면 가차 없이 짓밟고, 강하게 나오면 꼬리를 내리는 나라다. 막연한 대북 동정심은 우리의 입지를 좁히고 북한의 행동만 더 나빠지게 만드는 최악의 수다. 북한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도발 땐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만 우리가 대화를 주도할 길이 열린다. 무엇보다 강원인들은 남북관계가 오늘과 같은 위기 국면이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터질 때면 전 국민이 그러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민생은 도탄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이어지자 군인 손님이 평소보다 60% 이상 줄었고 지역 군부대 간부들이 예약했던 연말 단체 회식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민통선 인근의 농업인들도 노심초사다. 남북 대치 상황이 되풀이되면 두려움에 민통선을 넘어 농사일을 이어갈 용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출렁거릴 때마다 접경지역 민생과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즉, 남북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수록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 접경지역 개발은 요원해진다. 접경지역의 민생을 살피는 특단의 대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분단 강원특별자치도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 위험하고 불행한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바란다.

2023년 11월 30일 (목)
江原日報
사설/칼럼 19면

가파른 사교육비 잡아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생 학원비를 포함한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는 2.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보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다. 2013년 3.0% 오른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학원 물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6%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1년 -0.3%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껑충 뛰었다. 일반 학원비뿐 아니라 음악학원(4.3%)·운동학원(5.2%)·전산학원(4.8%) 등의 강습비도 부쩍 인상됐다. 학교 보충수업비는 16.6% 치솟으며 1990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코로나19 엔데믹과 맞물려 대면 수업이 늘면서 사교육비도 급등한 것이다.

유사한 결과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4만명이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2조6,000억원이 늘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2021년(23조4,000억원)에 비해 11%가량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20년(30만2,000원), 2021년(36만7,000원) 이후 급증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도 많아져 초등학생 37만2,000원, 중학생 43만8,000원, 고등학생 46만원이다. 사교육 참여율(78.3%)도 역대 가장 높아 초등학생의 85.2%가 사교육을 이용 중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비단 공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청년세대(만 19~34세)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57%)이었다.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저출산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제로 인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소위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처음으로 빠졌다. 킬러문항만 없애도 연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초·중·고교 사교육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킬러문항 없는 수능을 계속 유지·발전시켜 이를 마중물 삼아 본격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기 바란다. 공교육 과정을 뛰어넘는 킬러문항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공교육 강화 정책을 촘촘하게 재설계하고 집행해 사교육병을 치유한다면 백년대계의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교육은 또다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공교육의 빈자리를 파고들려고 할 것이다.